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민심사단 역할·역량 강화해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 1단계 사업의 시민심사단 참여자들이 23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들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심사단 운영 과정과 업체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민심사단은 지난 10일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인 송암·마록·수랑·봉산 4개 공원에 대한 12개 업체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은 “하루 12개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는 시간의 촉박함과 업체 간 공정성을 이유로 시민들이 제안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시민들의 질문을 차단하고 이미 정해놓은 질문지 내에서 질문을 하게 한 것은 시민심사단을 둘러리도 이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공원의 특성에 따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질문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시민참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질문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별 시민심사단 구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민심사단 참여자들은 “광주의 공원과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공원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공원 조성 계획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공원별 정보와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시민심사단 참여 비율을 높이고 각 공원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평가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밀도 고층 아파트 건설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만 일관된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제안서 대부분이 1000세대, 많게는 2000세대 이상으로 계획된 30~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라며 “광주시는 도시공원이 난 개발되는 것을 막고 아파트 고도 제한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서의 공원조성계획은 랜드 마크 설치, 테마형 공원조성 등 과도한 시설 중심으로 녹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 계획은 물론 이후 공원 운영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으로 공원조성계획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문 차단 등 심사단 둘러리로 이용”

“업체 제안서 등 우려와 문제점 느껴”

시민심사단의 평가가 전체 평가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번 심사 총 점수 105점 중 시민심사단의 평가 비중은 5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심사단 참여자들은 “배점 점수가 너무 낮아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 간 차이도 1점 정도에 불과해 변별력을 두기도 힘들었다. 2단계 사업에서라도 시민참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공원은 시민의 공간이다. 공원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원 조성 계획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다. 공원 조성에만 사업비 2조 7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공원 전체 면적이 5만㎡가 넘는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1단계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마록공원 호반베르디움(주), 송암공원 고운건설(주), 수랑공원 (주)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주)이 선정됐다.

서은홍 기자



기습한파 찾아온 시장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기습한파가 찾아온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작불에 손을 녹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사학 법정부담금 대비 보조금 차등 지급

법정부담금 납부를 갈수록 저조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고등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한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에 인센티브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전년 대비 납부 증가율과 법정부담금 대비 증가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시 차감액을 적용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총수입으로 중당하며 교직원의 보험료(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납부액 중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2016년 14.3%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에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곳이며,

전액 완납한 학교는 5곳이다.

사학법인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기관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라 차등 적용해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수면제 탄커피로 유혹’ 금품 훔친 50대 여성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든 남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A(5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든 B(49)씨의 지갑과 신용카드, 현금 5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도 같은 날 오후 서구 치평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250만원 가량의 금목걸이를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3범인 A씨는 모텔 옆 방에 묵고 있는 B씨에게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며 유혹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3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중앙선 침범 승용차, 시내버스 충돌 1명 사망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8명이 다쳤다.

23일 오전 10시 43분께 여주시 오립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교차로에서 김모(57)씨가 운전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버스 승객 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닝 승용차가 중앙분리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사지마비 환자 행세로 수십억 챙긴 모녀

10년 동안 가짜환자 행세로 수도권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려한 모녀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얼마(66·여)씨와 딸 정모(36·여)씨를 보험금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딸의 남자친구 박모(33)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에 일어난 가짜 교통사고를 빌미로 의사를 속여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원을 가로 채고 이후 21여원을 더 받아 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어머니인 고씨는 10년 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중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많이 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모의했다.

고씨는 딸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타난 일시적인 강직 증상을 마치 사지마비 증상으로 둔갑시켜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 의사로부터 ‘상세 불명’의 사지마비 진단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계속적으로 사지를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환자 행세를 하며 의사와 간호사들을 속였고 외출할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철저히 살피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무려 10년 동안 수도권 일대 14개 요양병원을 옮겨다니며 보험사 두 곳으로부터 추가적으로 21여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벌였고 마비증세를 확인하려 나온 재판관까지 속여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오랜 사기행각은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환자와 작은 디테일 때문에 틀림이 나고 말았다. 이를 모녀와 다른 상대 환자는 한밤중에 정 씨가 멀쩡히 걸어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분한 마음에 바로 경찰에 알린 것이다.

병원에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자 정 씨는 다급한 마음에 3년 전 চে팅 방에서 만난 남자친구 박씨를 끌어들이 사촌오빠라고 속이며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보험사실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와 박씨는 부산까지 여행을 다니고 등산을 하며 공원에서 멀쩡하게 그네를 타는 등 정상인과 똑같이 행동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양손에 물건을 들고 발걸음로 버튼을 누르기도 했다.

한편 정씨에게 사지마비 진단을 내린 해당 의사는 경찰의 수사 동영상을 본 뒤 “사지마비 환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나도 속았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유사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